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소기업 혁신기반 강화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wshong@kosi.re.kr)

지역 위기 가속화

최근 들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래,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년 현재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47.2%에 불과하다.

표 1 수도권 vs. 비수도권(명목치 기준)

시도별	경제활동별	2015년	2018년	2021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50.1%	52.2%	52.8%
	총부가가치(기초가격)	50.3%	52.3%	52.9%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49.9%	47.8%	47.2%
	총부가가치(기초가격)	49.7%	47.7%	47.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인 제품생산기지에 편입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산업적으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1960~1970년대)에서 대량생산시스템에 기반한 중화학공업(1980년대 이후)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성장하였다. 지리적으로는 본사 기능은 수도권에, 생산기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원화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혁신에 기반하지 않은 양적인 생산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경제성장=고용 창출'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어 갔다. 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중심으로만 혁신기능이 집중되면서, 지역에는 대기업의 분공장만 존재하게 되는 불완전한 기업구조가 고착화되었다. 특히, 대기업 생산기지의 수도권 이전 및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가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비수도권의 1인당 노동생산성¹⁾ 격차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1.26배에 이르고 있다. 기업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성장기업 비율 역시 비수도권은 38.5%에 불과하다(통계청 2022).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다. 1970년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각각 28.7%와 71.3%였으나,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14만 명)하였고(통계청 2020),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8%(118개)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이상호, 이나경 2023). 수도권의 인구 증가는 대학 진학 및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대도시로 유입되는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청년 인구(20~30대)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48.5%(2000년)에서 54.0%(2019년)로 급증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51.5%(2000년)에서 46.0%(2019년)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군에 소재하는 인구는 8.1%(2000년)에서 6.0%(2019년)로 줄어들었다(박진경 2022). 비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생의 경우, 타 지역 취업률이 높아 지역 소재 기업에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표 2 지역 인재의 역외 이탈률(2018년 2월 대졸자 기준, 교육부)

구분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탈률 (%)	11.7	52.6	57.7	58.0	66.6	61.6	94.2	71	73.4	79.5	58.7	60.7	71.4	49.3	35.4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와 대기업 밴드 구조 중심의 생산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한계를 가져왔다. 지역의 대량생산시스템이 지역 대학과 기업 간 공생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 지역 내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 현상을 초래하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역설적이게도 중소기업 취약화와 지역 인력 유출 및 지역 대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게 된 것이다.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

지역의 문제는 경제성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가 양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 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수도권-지역 간 균형발전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층 더 복잡해지고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화 시대의 개발 방식으로 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음 경험한 문제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이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고민했던 주제이다. 당시 유럽은 일본의 추격으

1) 노동생산성=전체 매출액/총 종사자 수.

로 인한 경제성장을 저하 및 실업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시스템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생기업의 창출,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경영환경 조성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지역혁신체계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지역혁신체계란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활발한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의미한다.²⁾ 또한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공한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낙후된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핵심 과제는 혁신에 유리한 지역환경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었으며 주요 지원 대상은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 및 양극화 해소의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의 확립 및 이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를 지역에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혁신 기반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광역시·도의 경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혁신자원 분석 및 거래관계에 기반한 전략 수립 등 지역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를 들면, 전북과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7.9%, 28.7%이며, 강원과 경북 역시 29.4%, 29.7% 수준으로 전국 평균(50.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주로 지자체의 출연금 매칭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A지자체는 중앙부처의 국비 매칭사업에 5,132억 원(2019년)을 지출하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정 악화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가 경험하는 공통된 현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전용사업의 기획에 한계가 있다(행정안전부 2023, p.278; 홍운선, 김상훈, 김상신 2023).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지역혁신, 지역분권, 지방자치를 기치로 한 지역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법령의 취지와 달리 수도권-지역 간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제는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주요 내용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계획의 통합 및 상호식 계획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2003년 12월 제정 당시 규정).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7. 10.).

수립,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기존 계획의 유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정안전부 2022).

지역정책의 큰 틀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⁴⁾ 과거 대기업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탈피하고, 지역중소기업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확립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종합대책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② 지역기업의 창업-성장기반 보강, ③ 지역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④ 지역기업 혁신지원체계 활성화를 세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 산업생태계 속에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이 동참하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창업기반의 강화 및 혁신격차 완화방안 모색, 제도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과제:
지역의 창업기반
강화와 수도권-
비수도권 간
혁신격차 완화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서의 창업 기반 강화: 스타트업파크 조성

지역혁신체계에서의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집적된 자원과 네트워킹에 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의 양적 성장속도에 비해 입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공간 조성이 입지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들은 현재 환경 문제와 노후화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산업체가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서 산업계 오염물질의 80%가 배출되고 있다(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9, p.2-5). 또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가 증가하면서 도로, 교량,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분양공고 이후 입주기업을 찾지 못하는 산업단지도 늘어나고 있다(노컷뉴스 2023). 반면,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들의 경우, 대도시 주변의 혁신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수 인력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더 이상 적합한 공간이 아님을 시사하므로 입지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생태계 형성 및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입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창업이지만, 창업과 관련한 인프라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창업 초기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컨설팅 등 종합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수도권에 67.5%가 집적되어 있고, 비수도권에 32.5%가 위치하고 있다(표 3) 참조). 그러나 대전과 부산을

4)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23)을 참고하기 바람.

표 3 액셀러레이터 등록 현황(2022년 5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기업	200	40	13	22	7	24	9	3	9	3	6	11	7	6	5	7	3	375
비율	53.3	10.7	3.5	5.9	1.9	6.4	2.4	0.8	2.4	0.8	1.6	2.9	1.9	1.6	1.3	1.9	0.8	100
	67.5			32.5														100

자료: 창업진흥원 제공.

표 4 벤처캐피탈 지역별 분포(2019년 기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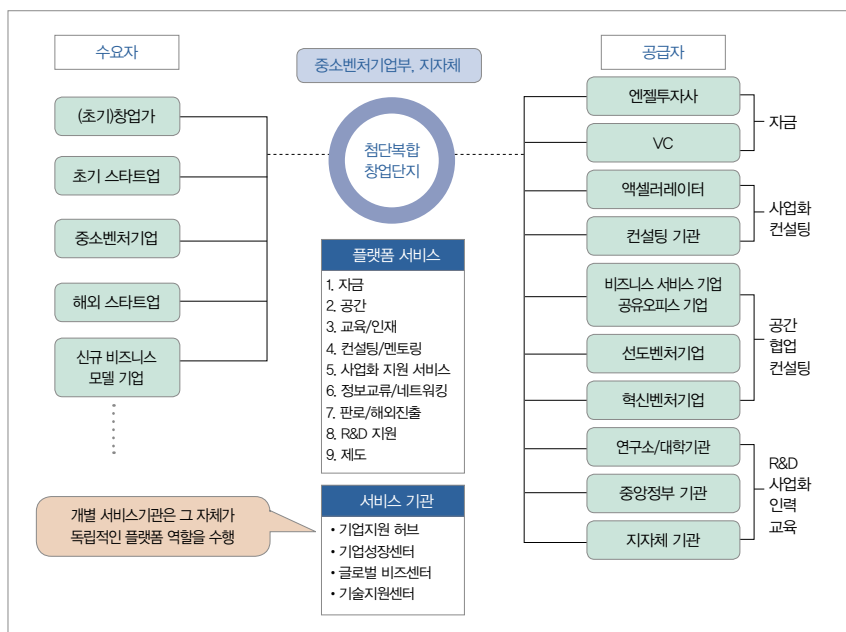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분포	114	7	-	5	1	2	-	-	-	-	-	-	-	-	-	-	-	129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Firm List 제공.

제외하면 비수도권의 비중은 20.2%에 불과하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심하여 수도권이 절대 다수인 93.8%를 차지하며, 벤처캐피탈이 없는 지자체도 12개에 이르고 있다(〈표 4〉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첨단 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창업, 벤처투자의 비중 확대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중소벤처기업부 2023)으로 프랑스의 Station-F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작하였다. 핵심 내용은 정주환경이 갖

그림 1 창업과 혁신성장의 메타 플랫폼



자료: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2020.

취진 지역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모든 생태계가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집적화된 창업공간, 즉, '첨단복합창업단지'를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에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액셀러레이터로 대표되는 창업컨설팅(자금 지원 기능도 병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주변에 문화와 교육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서 창업 초기기업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그림 1〉 참조).

창업 인프라 격차를 단기간에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019년 인천(송도)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대전, 충남(천안), 경북(경산)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비수도권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지향적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혁신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혁신 격차 완화방안 모색

4차 산업혁명 등 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해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지역 간, 기업 규모별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결과로써,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부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1개의 대기업이 무너지면 가치사슬로 묶인 거래업체와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8년 발생한 조선산업의 위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 대표되는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지역기업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혁신인프라의 구축은 기업의 생성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혁신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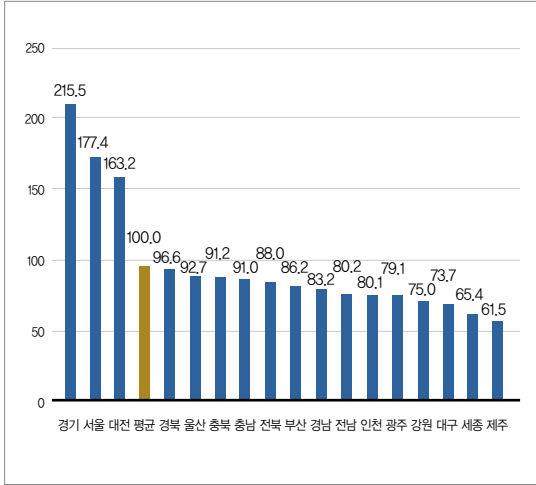
표 5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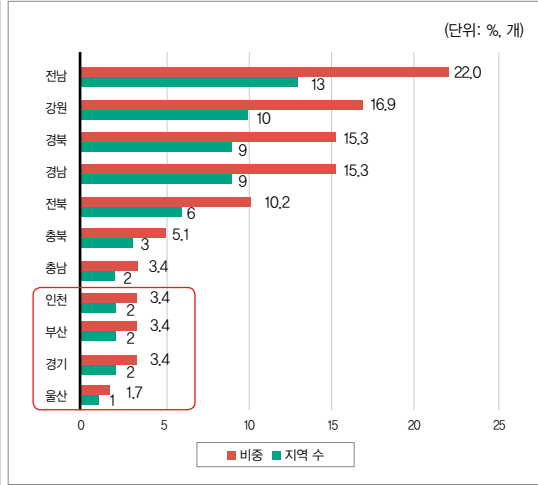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2016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2016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수도권	45.9	64.4	8.8	38.1	47.0	5.4
(비중)	(66.1)	(69.2)		(61.0)	(62.9)	
비수도권	23.5	28.7	5.1	24.4	27.7	3.2
(비중)	(33.9)	(30.8)		(39.0)	(37.1)	
합계	69.4	93.1	7.6	62.5	74.7	4.6
(비중)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2022, p.53-55.

그림 2 시도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및 소멸위험지역 비중



주: 2021년 지역 평균=100%일 때 상대수준.
자료: 인지혜 2022.



자료: 허문구 2022.

의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에서 협력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이 69.2%를 차지하고, 주체별로는 기업체가 79.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였던 바, 당분간 그 격차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인력 역시 수도권이 6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체별로는 기업체가 63.7%를 차지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 인력분포의 지역 간 격차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표 5〉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p.53-55).

기존의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혁신활동은 지역소멸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활동에 적극적이면서 성장하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고(강호제, 류승한, 서연미 외 2019),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원, 전남, 경북 등에서 소멸위험지역 수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허문구 2022).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2021년 기준)를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이 평균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소멸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자원을 축적하여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지배구조 확립

2023년 4월, 「지역중소기업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지역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기반 확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

표 6 협의회의 주요 기능 및 역할

구분	기능 및 역할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최고 의사결정기구 로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역중소기업 중장기 육성계획,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심의·의결
지역중소기업지원협의회 (신설) (위원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 내 사업·자원 배분의 적절성 검토, 이해관계의 조정, 지자체의 정책수요 자문·협의 *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 작성 및 확정
지역중소기업 전담조직	- 지자체 조직으로 사업 및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

자료: 홍운선, 김상훈, 김상신 외 2023.

진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부처 간 원활한 소통 채널을 만들고, 지자체가 지역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정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무분별한 사업발굴을 방지하는 견제 기능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지원은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 육성계획을 기반으로 기업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성장-재투자를 위한 패키지 방식의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혁신경쟁이 불가피하며, 무엇보다 비용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저임금의 비용우위 전략이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경쟁전략 전환에도 여전히 과거에 조성되었던 정책체계와 사회적 규범이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화하지 못하는 데 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규제로 인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맺음말

지역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시스템이 유효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지속하기 어렵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혁신지향적 중소기업들이 지역별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다.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혁신자원, 정주환경 등을 고려한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혁신정책 역시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원정책은 이들이 지역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역중소기업법」의 제정은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지역중소기업 정책방향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인지하고, 중장기적 계획의 관점에서 창업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지향적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강화를 목표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 지역소멸 위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호제, 류승한, 서연미, 표한형.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2022.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20.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
- _____. 2023.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 노컷뉴스. 2023. 혈세 들였는데 '분양률 0%' 산업단지, 전국 12곳. 10월 12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지역 창업·혁신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첨단복합창업단지 조성방안 연구.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박진경. 2022.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 대응전략. 지역산업과 고용 불호.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 안지혜. 2022. 2021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음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상호, 이나경. 2023.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통계로 본 지역고용. 지역산업과 고용 불호.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9.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11월 19일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 2023. 스타트업파크 사업개요. 내부자료.
-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6월 29일, 보도자료.
- _____. 2022. 기업생멸행정통계.
-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1월 1일, 보도자료.
- _____. 202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허문구. 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월간 KET 산업경제 10월호. 42-57. 세종: 산업연구원.
- 홍운선, 김상훈, 김상신, 차경진, 김희재, 장영재. 2023. 지역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 연구. 세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